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

정 영 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03

북한은 지난 20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북한이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명의로 한국 측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라고 하면 장성급 수준의 회담으로 볼 수도 있고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 다소 애매한 표현의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제기된다. 이제까지 북한이 제의한 군사회담의 대부분은 장성급 회담이라든가, 군사실무회담 등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고위급’이라는 막연하면서도 다소 중대한 의미를 지닌 회담 제의로 우리 정부와 국제적 관심을 끌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북한이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다라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제의 시점을 절묘하게 선택하는 민첩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의 상황 타개를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된 시점에서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중에 대하여 ‘성실한’ 대화주의 명분을 획득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한국 정부로 하여

금 북한의 남북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였다.

올해 들어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필두로 남북한 관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각종 회담을 제의하였다. 지난 5일 북한이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무조건 대화’를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진정성’이 없는 제의로 치부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화하도록 한 이번 ‘대화공세’ 전략은 일차적으로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순히 대화공세 차원의 일회성 회담제의일까 아니면 치밀한 정책적 계획 하에서 나온 정치·군사적 수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를 가지고 남한을 흔들고 그들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소위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군대를 앞세우는 대남정책은 그들의 내부조직 정비에서부터 드러났다. 먼저 북한은 그들의 대남공작 라인을 군부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 북한군부의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알려진 상장 김영철이 2009년 5월경 ‘인민군 정찰총국 국장’으로 보임되었다. 인민군 정찰총국은 노동당 소속이었던 작전부와 35호실, 그리고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을 통합해 확대 개편된 공작기구다. 과거 당 작전부는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 및 안내, 대남 및 대외침투 루트 개척 등의 임무를 맡아왔으며, 유사시 남한과 미국, 일본사회에 파고들어 교란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35호실은 대외 및 대남 정보수집을 담당하면서 대남 또는 해외테러 공작도 감행한 기관이다. 인민군 정찰국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으로서 간첩양성 및 남파 등을 임무로 하면서 요원납치 및 암살, 전략적 모략공작, 핵심전략시설 정찰 등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제 공작기구들의 임무를 아우르는 통합조직으로서 인민군 정찰총국이 등장한 것은 대남공작 활동에 북한군부가 전면으로 부상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 업무가 일원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대남공작활동이 노동당과 군, 그리고 노동당 내에도 작전부와 35호실로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또는 충성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방위원회 → 인민무력부 → 정찰총국’으로 이어지는 대남공작활동 관련 지휘체계 일원화 조치가 단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 김영철 정찰총국장으로 연결되는 단선적인 대남공작 지휘체계가 수립된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같은 김정일 위원장의 직할통치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신속하고도 강력한 군부중심의 대남공작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이 기존의 '정치논리' 중심에서 '군사논리' 중심으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군대를 앞세우는 정치) 논리를 고려해 볼 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선군정치가 군사적 수단, 즉 '힘'의 외교를 추구하고 이에 기반한 외교(선군시대 외교전략) 또는 대남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대남 정치적 비난공세에 더하여 각종 군사적 위협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도해 온 것 역시 '군사논리' 중심의 대남공작 활동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군사적 위협공세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화전양면(和戰兩面)적 행태로 나온 것이 사실이다. 2008년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협하고 공단 출입 인력과 차량을 대폭 줄이는 조치를 앞장서서 주도해 온 인물이 현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이라는 것은 북한 군부가 북한의 대남위협공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군사도발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 김영철 정찰총국장 형태의 군부라인이 기동된 결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군부를 중심으로 군사적 위협공세 → 군사대화 제의라는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북한은 서해 해상지역을 그들의 군사적 위협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주도면밀하게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다양한 침범행위를 통하여 NLL을 부정하고 이어서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NLL 침범 또는 도발행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 연평도 군사공격도 남한 군대가 연평도 인근에서 벌인 군사훈련을 남한에 의한 그들 해역에 침범행위에 대한 방어차원이라고 북한은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필요성이 제기 될 경우 북한은 언제든 서해상 또는 서해5도에 대한 무력도발 행위를 되풀이할 것이다. 북한은 서해 사태와 같은 무력충돌을 인위적으로 감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초래하여 남한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려 할 것이다. 즉 군사적 위협 강화 → 남북 군사대화 제의 → 남북관계 개선 필요인식 유발 → 남북대화 재개 추진 → 남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요구이행 강요 → 대남 주도권 획득이라는 대남공작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제의로 군사 실무회담이 있었고 연평도 포공격 이후 이번 군사 고위회담 제의가 나온 것은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작 실태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하여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공격으로 인한 고립상태를 완화시키고 남북관계의 재개를 통한 주도권 확보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회담 형식을 통해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각종 대남 비난공세를 취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대부분이 군사실무회담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금번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이해된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후 도래될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진정

성을 찾지 못함에 따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가 불투명해 질 경우다. 북한은 남북 군사대화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측이 그들이 아니라 남한 정부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남한에게 돌려 미·중의 대화요구를 남한이 거부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해소를 위해서는 남북 당사국간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반대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북 군사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체결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6자회담 재개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 용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둘째,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받아들여 회담이 성사될 경우이다. 여기에서도 북한 당국은 우리가 바라는 요구대로 나오기보다 그들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성토했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천안함 사태와는 무관하며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연평도 군사공격은 한국의 군사도발에 따른 방어적 차원에서 초래되었다고 강변할 것이다.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NLL 무력화를 도모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천안함 사태 이후 다시 제기된 한국의 대북 심리전 전개를 적극 억제하고자 하는 요구에 집중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은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심리전 방송재개를 가장 큰 체제위협 요인이라고 강변할 것이다. 전단과 대북 방송을 통해 김정일과 그 후계자의 가족사와 개인사생활이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그의 권위와 위신이 크게 손상됨은 물론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 대한 비평과 불만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부정적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회담의 지속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 군사회담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0년 2년 만에 재개된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는 우리 측의 천안함 관련 공세에도 불구하고 시종 유연한 태도를 표출한 것은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군사회담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북한 군부는 군사회담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또는 개성관광사업 재개와 같은 여타의 남북회담으로 연결시켜나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언제라도 국지도발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